

尹 “영장 집행 불법” 주장… 전·현직 판검사들 “자의적 해석”

체포 뒤 “대한민국 법이 무너져내렸다” 2분 48초 분량 영상 배포
광주·전남 법조인들 “공수처 수사권 당연·영장청구 위법 아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체포 영장 집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광주·전남 전·현직 법조인들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하기 직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영상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 등에 대해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2분 48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이 모두 무너져내렸다”라면서 “수사권 없는 기관이 영장을 청구하고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발부하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불법이고,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전·현직 법조인들은 ‘궤변’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이미 해소된 문제라는 것이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이미 수사권이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면 법원이 바로 영장을 기각했을 것”이라면서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서 이미 수사권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 후 발부를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이 위법이 아닌 이상 공수처의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는 의견도 있다.

광주지법 A판사는 “김·경 시행령의 위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면서 “경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인정되는 만큼 공수처와 함께 공조본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공수처의 영장청구는 적법하다는 것이 전·현직 법조인들의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은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있고, 공수처법 상에도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지법의 B판사는 “중복관할은 법에서 얼마든지 예외하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위법하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C변호사는 “공수처법 단서 조항은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피의자 주거지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데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주장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C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모셨다는 점이 부끄럽고 내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개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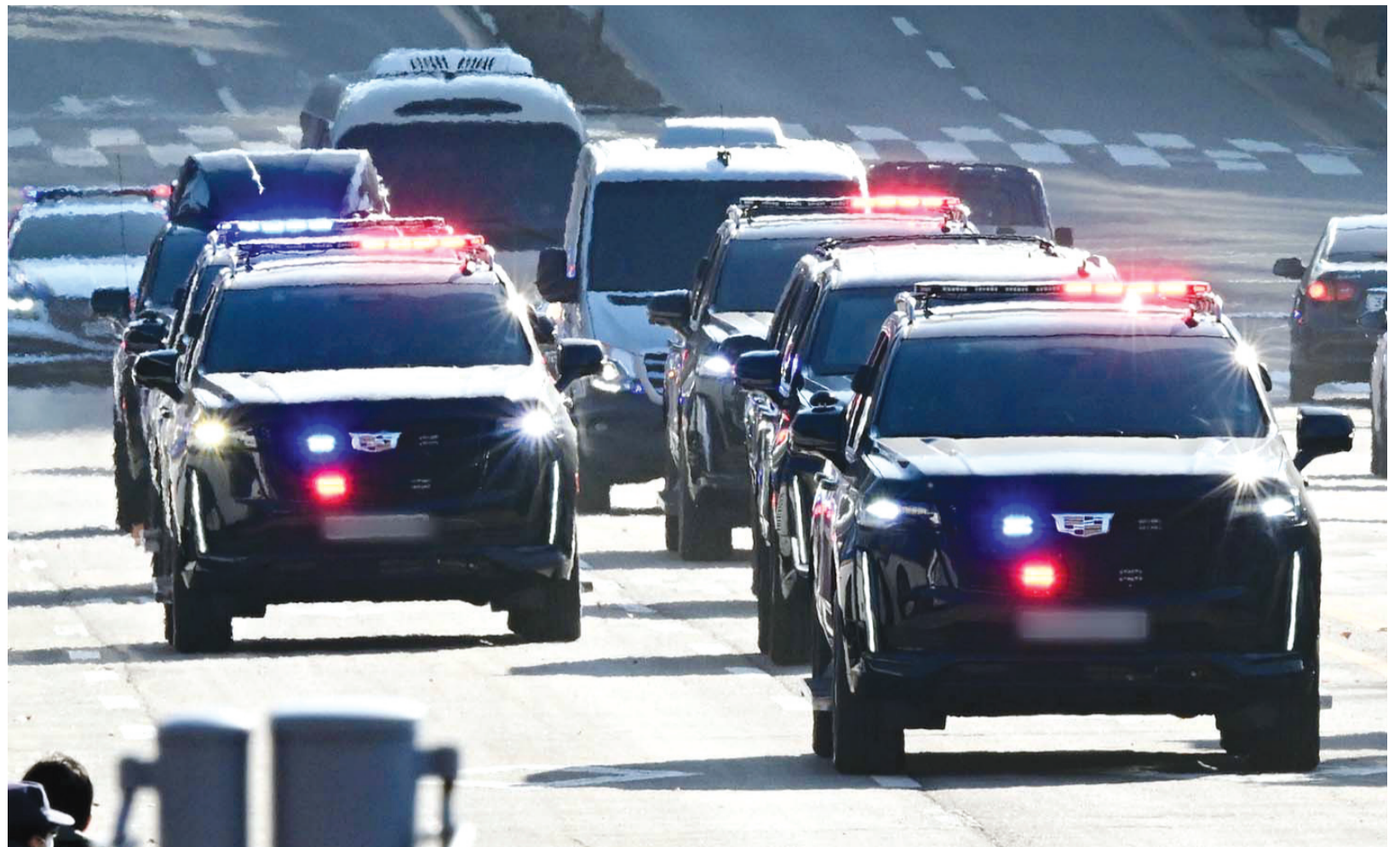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불응하는 태도는 자가당착(自家當着)이라는 지적도 있다. 체포 영장이 위법하다고 확인한다면 체포에 응하는 게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중 한 가지만 위법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이후 수집된 증거는 모두 위법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직 A판사는 “체포영장 위법 여부는 재판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별도의 불법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더라도 서부지법에서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단까지 했다”면서 “법원 판단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법질서가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조인 출신으로 할 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A판사는 이어 “체포적부심을 통해 체포영장 위법 여부를 판단 받으면 될 문제지만 적부심을 안한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입장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영상에서 주장하는 거짓 공문서 문제는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법적 평가 대상이 아니고 이는 추후 수사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될 문제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통취재단>

尹 수색영장 보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적시

범죄혐의 처음 제시

체포 사유 ‘위헌·위법 계엄 선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한 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나라하게 적시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간접적으로 드러났지만, 윤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일보가 확보한 윤 대통령에게 집행한 수색영장에는 피의자 성명 윤석열, 직업 공무원이라고 적혀있고,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로 기재돼 있다.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1월21일이다.

공수처는 수색영장에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계엄해제 담화문, 박안수의 계엄 포고문, 사건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사진과 언론보도, 헌법 등 관련 규정, 피의자 및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 사건 내란의 공범(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여인형, 이진우) 등의 진술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한 점을 들었다. 경찰과 계엄군 등에게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피의사실로는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 정부 예산안 대폭 감액,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의혹 등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계속해 추진하자, 김용현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해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전산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선거 관련 전산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을 선거사범으로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적혀있다. 즉, 지난해 12월 3일 사회전반에 전사·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징후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돼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공범들과 공모해 추기로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에 진입하고 외곽을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도 담겼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공범들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 등과 계엄군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기관인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 한 점을 들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尹, 공수처 조사 인정 안해… 묵비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께까지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오전 조사에서 이재승 차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조사 상황과 관련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에

따라 조사가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서 “불미스러운 유행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입장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남은 조사에서도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